



## 공정 보도는 과연 최고선을 지향하는가? 칸트의 윤리형이상학과 공맹(孔孟) 사상을 통해 본 공정 보도 의 문제점과 한계, 그리고 유가 언론학적 극복 방안\*

심훈 한림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

본고는 사회적 불신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언론이 도구적 형식 세계에 근간하며 경험 준칙에 불과한 공정성을 뉴스 제작의 중추적인 직업 가치로 삼기보다 유가 사상의 최고선인 인(仁)을 향한 도덕적 실천 원리로서의 충서(忠恕) 정신을 칸트의 정언 명령에 따른 새로운 직업 규범으로 상정해야 한다고 인식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만고불변의 도덕 법칙을 정립하고자 했던 칸트의 윤리형이상학을 살펴본 후, 인(仁)을 최상위 윤리 덕목으로 내세웠던 공자와 맹자의 유가 사상을 통해 현대 사회의 저널리즘이 당위적으로 추구해야 할 언론 가치와 함께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실천 규범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이후 연구자는 최고선으로서의 언론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도덕 원리가 충서(忠恕)임을 논술한 다음, 한국의 방송 저널리즘이 뉴스 제작 및 보도에 있어 충서(忠恕) 정신을 담지하기 위해서는 의(義)와 예(禮), 그리고 중용(中庸)이라는 실천적 하위 규칙들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자유와 평등에 관한 개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가운데 사회적 약자가 인간다운 삶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복지 공동체의 구축과 안녕을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핵심어:** 공정성, 칸트, 공자, 맹자, 유가 저널리즘

---

\* 이 논문은 2017년도 한림대학교 교비연구비(HRF- 201710-006)에 의해 연구되었습니다. 더불어 여러 차례의 수정 과정에서 거친 원고를 꼼꼼히 들여다 봐 주시고 귀한 조언을 해 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님께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 shimh@hallym.ac.kr

# 1. 머리말

한국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하락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4년의 세월호 사건이 언론에 대한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며 언론 종사자들에게 '기레기'라는 멸칭(蔑稱)까지 안겨 주었지만 수많은 여론 조사 결과들은 이미 지난 수십 년간 한국 언론의 신뢰 그래프가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김세은, 2006; 류춘열, 2016; 이준웅·최영재, 2005; 한국언론진흥재단, 2015).

언론이 입법, 행정, 사법부에 이은 제4부로서 공론장을 형성하고 속의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주된 매개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 같은 현상은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다. 이는 시민들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돕기 위해 객관적인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함은 물론, 권력을 감시하고 공동체 내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공적인 토론을 촉진하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언론이 수행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기 때문이다(Hallin & Mancini, 2004). 그런 까닭에 언론이 해당 사회, 해당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면 언론의 제반 기능은 제대로 발휘되기가 어려우며, 진정한 공론장의 형성을 통한 속의 민주주의의 구현은 요원해 질 수밖에 없다(김세은, 2013).

인간의 최고선을 공부하는 학문이 정치학이라고 보았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미 2300여 년 전에 정치학의 입문이 윤리학이라고 규정지은 바 있다(천병희, 2013). 말하자면 인간의 최고선을 공부하는 출발점은 윤리학이라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각이었다. 마찬가지로 언론학이 궁극적으로는 언론의 최고선을 추구하는 학문이라고 가정할 경우,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을 따른다면 언론학으로의 입문 역시, 언론 윤리학을 통해 행해져야 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언론의 신뢰 회복을 위한 시금석 마련이 언론계는 물론, 언론학계의 최우선 당면 과제라는 시각에서 언론학계가 언론의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도덕적인 차원에서 제시해야 하며 이를 위한 출발점은 언론 윤리학으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고 간주한다. 이는 언론에 대한 궁극적인 신뢰가 전문성 이상으로 언론인의 도덕성에 기반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Blach-Ørsten & Burkal, 2014; Vultree, 2010), 도덕 법칙에 의거해 실천궁행(實踐躬行)하는 언론만이 범사회적인 신뢰를 얻을 수 있기에 감성적이며 비윤리적으로 흐르기 쉬운 언론을 이성적이고 규범적인 언론으로 바로 잡기 위한 언론 윤리학이 뉴스 매체에 대한 신뢰 구축의 남상(濫觴)<sup>1)</sup>으로 작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연구자는 언론 윤리학의 정립이 언론학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공고

1) 넘칠 남(濫), 잔 상(觴). 모든 사물의 시초. 큰 강물도 그 근원은 술잔이 넘칠 정도의 작은 물에서 시작한다는 뜻.

히 정초된 언론학이 언론을 바르게 세우는 데 이바지하며 바르게 선 언론이 공동체 구성원들의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언론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최고선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는데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인과론적 명제 아래, 먼저 한국 언론의 문제점을 윤리형이상학적인 측면에서 진단한 후,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도모하고자 한다.

도덕 철학을 전개함에 있어 보다 구체적으로, 본고에서는 칸트(Kant)의 윤리형이상학과 공자, 맹자의 유가 사상을 바탕으로 현재의 언론 실천 강령에서 핵심적인 직업 규범으로 통용되고 있는 공정 보도의 윤리적 문제점 및 한계, 그리고 그 극복 방안을 순차적으로 논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먼저, 칸트가 자신의 윤리형이상학에서 추구하고 있는 도덕 법칙에 대해 알아본 후, 유가에 있어 최고선으로 작용하고 있는 인(仁) 사상이 칸트의 도덕 법칙을 합목적으로 만족시키는 도덕 원리임을 논증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상적 언론—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방송 저널리즘—의 필요조건으로서 국내 언론계와 언론학계에서 마치 최고선인 것처럼 비증 있게 다루고 있는 공정 보도가 칸트의 윤리형이상학에 의하면 도덕 법칙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비윤리적인 직업 실천 행위에 불과하며, 공자가 인(仁) 사상의 통섭적인 실천 덕목으로 규정했던 충서(忠恕) 정신이야말로 칸트의 정언 명령에 명징하게 부합하는 실천 원리임을 논술할 것이다.

이후, 연구자는 유가 사상의 수많은 윤리 강령 가운데 뉴스 제작 현장에서 마땅히 활용되어야 할 충서(忠恕)의 대표적인 하위 윤리 규범들로 의(義)와 예(禮), 그리고 중용(中庸)을 꼽은 후, 이들이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가운데, 사회적 약자가 인간다운 삶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공동체 구축을 유도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 2. ‘최상위 도덕 원리’에 관한 기본 고찰

### 1) 언론의 신뢰 하락과 언론의 공정성

공적 의제를 다루고 민주적 여론을 형성하며 권력 남용을 감시하는 언론 매체는 여타 공공 기관들과 함께 신뢰도 측정의 주요 대상으로 자리해 왔다. 미디어에 대한 신뢰 조사를 수십 년 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온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미 언론에 대한 미국인들의 신뢰율은 다소 떨어졌지만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들로부터 여전히 신뢰할 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Kohut, Doherty, Dimock, & Keeter, 2012).<sup>2)</sup> 언론 선진

2) 미 언론에 대한 신뢰율은 2002년의 71%에서 2012년의 56%로 15%포인트가 떨어졌다.

국으로 거론되는 핀란드, 캐나다, 독일, 영국 등의 뉴스에 대한 국민적 신뢰 역시, 여전히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Reuters Institute)가 2016년에 세계 2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뉴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신뢰한다”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비율은 핀란드 65%, 캐나다 55%, 네덜란드, 54%, 독일 52% 영국 50%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Newman, Lavy, & Nielsen, 2016).

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미디어에 대한 신뢰도는 1994년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이후, 2016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sup>3)</sup>(오대영 2015; 한국언론진흥재단, 2014, 2015). 특히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Newman, Fletcher, Lavy, & Nielsen, 2016)가 근래 들어 보여주는 분석 결과는 신뢰를 둘러싸고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한국 언론의 현주소를 잘 보여주고 있다.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는 2016년에 세계 26개국을 대상으로 자국 뉴스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했는데 여기에서 한국은 “뉴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신뢰한다”는 대답이 22%에 불과해 26개국 가운데 25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진(2003)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사적 신뢰가 높고 공적 신뢰가 낮기에 개인 간의 신뢰 확산이 요구되는 서구와 달리 정당성 있는 공적 제도의 창출을 필요로 한다. 이와 관련해 김세은(2006) 역시, 한국 언론이 절차적 공정성을 중시하는 규범적 모델-‘옳은 언론’-을 지향해야 추락하는 신뢰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공익성과 함께 공공성 제고를 구현 가치로 내건 영국 BBC의 방송 철학은 한국 공영 방송의 설립 이념에도 그대로 적용돼 한국 공영 방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는 나침반 역할을 해왔다(정용준, 2013; 정윤식, 2013).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독립성과 방송 운영의 자율성을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한 채 출범한 한국의 공영 방송은 미디어의 핵심 역할 가운데 하나인 권력 감시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보여 왔으며(강명구, 1989) 그러한 과정에서 외부-특히 정치 권력-로부터의 독립을 보장받기 위해 불편부당성 및 객관성에 중점을 둔 공정 보도를 가장 중요한 직업 규범으로 인식해 왔다. 이에 따라 국내 언론학계 역시 지난 수십 년간, 공정 보도의 정의 및 구성 요소, 그리고 실천 현황과 구현 방안 등을 둘러싸고 수많은 논의를 활발하게 개진해 왔다(e.g., 김연식, 2009; 손영준, 2011; 이완수·배재영, 2014; 이종혁, 2015; 이준웅·최영재, 2005; 최영재·홍성구, 2004).

하지만 언론의 최고선이 인류의 당위적이고도 보편적인 최고선과 궁극적으로 같은 목표 지점을 겨냥하고자 한다면 공정성이 결코 언론의 최고선 달성을 위한 핵심 또는 절대 가치로 인식

---

3) 2016년 현재, 뉴스에 대한 한국인들의 신뢰도는 2.86(5점 만점)점에 머물고 있다.

되어서는 안 되며 동시에 공정 보도 역시, 뉴스 제작의 중추 과제로 간주되어서도 안 된다. 그럼, 먼저 칸트(Kant)의 두 저서, 『윤리형이상학정초』(1785/2015) 및 『실천이성비판』(1788/2015)에서 기축 개념을 형성하고 있는 순수 실천이성으로서의 ‘선의지’와 함께, ‘의무 법칙,’ ‘정언 명령’ 그리고 ‘실천적 도덕 법칙’을 통해 왜 공정성이 방송 저널리즘의 실천 행위에 있어 결코 당위적인 직업 윤리로 규정되어서는 안 되는지 그 철학적 한계 및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 2) 칸트의 윤리형이상학: 순수 실천이성을 형성하는 선의지와 의무, 그리고 정언 명령

18세기의 서구 자연 과학이 실증 가능한 방법론의 정립을 기반으로 눈부신 학문적 발전을 이룬 것처럼 철학에 있어서도 포괄적이고 타당한 법칙을 정립함으로써 윤리형이상학의 정초를 단단히 다지고자 했던 칸트는 어떤 경험적 조건에도 기초하지 않는 만고불변의 도덕 법칙을 수립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칸트가 한평생 관심을 기울인 연구 대상은 “개개의 윤리 세칙들이나 도덕적 행위의 실례가 아니라, 윤리 도덕의 원칙”이며 “무수한 개개의 경험 법칙이나 경험적 인식의 사례들이 아니라, 그런 인식들을 가능하게 하는 원칙”이었다(Kant, 1788/2015, 344쪽).

칸트는 윤리형이상학에 있어 도덕 법칙의 발견 및 수립이 가능한 이유로 먼저, 인간이 자연 세계뿐 아니라 예지 세계<sup>4)</sup>의 성원이라는 사실을 내세우고 있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이성을 지닌 존재자이며 그렇기에 이성을 통해 의지를 자유롭게 세움으로써 원인성에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자연 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이다. 따라서 선형적으로 이성을 지닌 인간은 경험을 통해 선의 개념을 이해하고 윤리 규범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이성이 지니고 있는 도덕 법칙에 따라 선의 개념을 생득하게 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문제는 무엇이 선하고 또 무엇이 악한지를 인간 지식으로부터의 어떠한 도움도 없이 어떻게 선형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칸트는 결국, “이 세계에서 또는 도대체가 이 세계 밖에서까지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선하다고 생각될 수 있을 것은 오로지 선의지 뿐”(Kant, 1785/2015, 21쪽)이라는 판단을 내놓는다. 선의 개념이 시대와 장소, 문화와 역사, 개인적 경험 등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반면, 각 시대 또는 여러 장소에서 제각각 지향해 온 선에 대한 순수한 의지만은 “그 자체로 또는 내재적으로 무조건적인 가치를 갖는다”는 것이다(Kant, 1785/2015, 20쪽). 그렇다면 자신이 지니고 있는 선의지가 과연 칸트적 입장에서 순수한 도덕적 실천의 이성, 즉 실천이성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까?

4) 인간의 주관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감성적 경험으로는 인식할 수 없으며, 순수하게 사유만 할 수 있는 이념적 존재의 세계.

칸트의 윤리형이상학에 있어 선의지는 그가 내세우는 이론과 명제의 중추 개념으로 작용하는데 칸트는 선의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의무' 개념을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의무에 어긋나는 것으로 인식된 모든 행위들은, 그것들이 비록 이런저런 의도(관점)에서는 유용하다고 할지라도" 선의지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Kant, 1788/2015, 128쪽). 반면, 행위의 결과에 대한 일체의 이해 관계를 배제한 채 주관적인 경향 없이 특정 행위를 수행할 경우, 그러한 행위는 의무에 따른 것으로 간주되며 그 행위는 비로소 선의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된다.

그리하여 이성적 존재자로서 도덕적 의무를 마땅히 수행해야 한다는 윤리 규정은 '~하라!'라는 당위적 의무 '명령'으로 나타나며, 그것에 준거해 행위해야만 하는 필연적 실천 명령으로 다가온다. 여기에서 도덕적 실천 법칙을 향해 행위자가 내린 당위적 의무 명령은 칸트 자신이 '정언 명령'이라 부르는 지시 명령으로 작용하며 정언 명령은 궁극적으로 이성적 존재자에게 '실천 법칙'으로 작용하기에 자기 자신에게 자율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이성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법칙을 부여하는 입법적 기능을 갖게 된다(Kant, 1785/2015, 21-23쪽).

칸트는 특정한 결과를 기대하거나 예상하지 않고 정언 명령에 따른 선의지만으로 도덕적 실천 행위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이는 아직까지 개개인의 준거 규칙인 준칙에 해당하는 바, 이러한 준칙이 도덕적 보편 법칙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타인에게도 해당 준칙이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조건 짓는다. 그가 『실천이성비판』(1788/2015)을 통해 결론적으로 전달하는, "너의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 법칙 수립의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위하라"(91쪽)라는 구절은 칸트의 윤리형이상학적 도덕 법칙을 구성하는 핵심으로 자리한다. 말하자면, 의무 명령에 따라 실행되는 도덕적 실천 이성의 진위 여부는 보편성의 원칙을 제대로 충족시킬 수 있는지에 따라 옳게 확립된다는 것이다. 이는 타인에 의해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는 행위자의 선의지는 제아무리 자신의 행위를 의무에 따른 실천 이성이라고 강변할 때와 장소, 지역과 문명을 관통하는 도덕 법칙으로 승화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칸트는 보편성을 얻지 못한 채 주관적 동기 또는 정념적<sup>5)</sup> 경향성에 의존하는 개개인의 준칙은 이성적 존재자의 실천적 행동 조건들을 기대 결과의 관점에서만 규정한다며 이를 '가언적 명령들'이라고 칭하였다. 그리하여 『실천이성비판』(1788/2015)을 통해 칸트가 내리는 결론은 타인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 있는 당위적 의무 개념으로 무장한 순수한 이성만이 선의지를 규정하기에 충분하며 의무 명령(또는 정언 명령)을 통해 실천적으로 올바른 규칙들만이 비로소

---

5) 칸트는 『윤리형이상학정초』(1785/2015)와 『실천이성비판』(1788/2015)에서 '정념적'이라는 표현을 '감상적', '감각적'이라는 표현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도덕 법칙을 형성하는 실천 원리로 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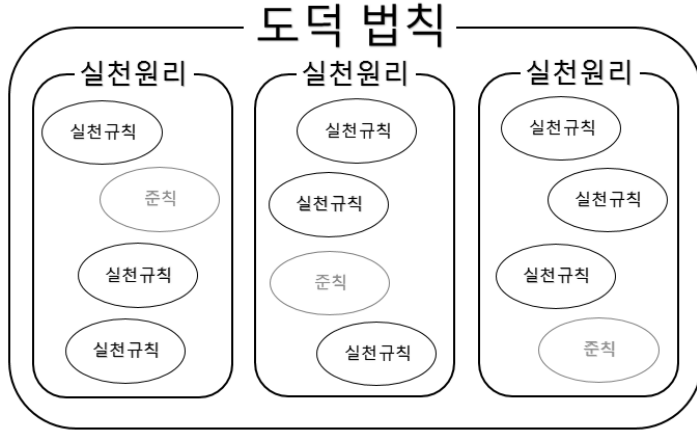


그림 1. 칸트의 윤리학에 따른 도덕 법칙 도해

### 3. 연구 문제

그렇다면, 칸트의 도덕 법칙을 만족시킬 수 있는 언론의 최고선은 과연 무엇일까? 다시 말해, 어떠한 주관적 의도나 욕구된 결과의 관점에도 치우치지 않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의무적 선의지를 내재한 저널리즘의 최상위 도덕 원리는 무엇으로 상정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본고에서는 먼저 한국 언론—특히 방송 저널리즘—의 중추적 직업 규범으로 작용하고 있는 공정 보도의 윤리형이상학적인 문제점을 살펴본 후, 칸트의 도덕 법칙을 만족시키는 언론의 최고선과 함께 이를 지향하는 실천 원리 및 실천 원리의 하위 실천 규칙들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들을 제기하고자 한다.

**연구 문제 1:** 한국 언론의 중추적 직업 규범으로 작용하고 있는 공정성은 칸트의 도덕 법칙에 비춰볼 때 어떠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가?

**연구 문제 2:** 칸트의 도덕 법칙에 따른 언론의 최고선은 어떠한 가치를 지녀야 하며, 해당 가치는 어떠한 실천 원리를 함유해야 하는가?

**연구 문제 3:** 칸트의 도덕 법칙을 만족시키는 언론의 최고선을 향한 도덕적 실천 원리는 어떤  
하위 실천 규칙들로 구성될 수 있는가?

## 4. ‘최상위 도덕 원리’와 그 실천 규칙

### 1) 도구적 형식으로서의 공정성의 실천 윤리적 한계

방송 저널리즘에 있어 공정성이라는 가치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대단히 크고 무겁다. 이는 전파를 통한 시청각 정보의 전달이라는 매체 기술적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수용 범위 및 메시지 전달 효과의 강력함은 국가로 하여금 방송 산업 부문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도록 유도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한정된 주파수 대역을 기반으로 탄생한 방송 매체가 공공재로 기능해야 한다는 합의가 범사회적으로 형성되면서 정부는 방송 매체의 인·허가 및 각종 규제와 관련해 공적인 관리와 통제를 실시해 왔다(강남준·김수영, 2008; 정윤식, 2013).

하지만 서구와 달리, 정부로부터의 정치적 독립성과 방송 운영의 자율성을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한 국내 공영 방송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보장받기 위해 불편부당성과 균형성, 그리고 객관성에 중점을 둔 공정 보도를 가장 중요한 직업 규범으로 간주해 왔다. 이러한 연원에는 집권 여당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언제든지 정권의 나팔수가 될 우려가 큰 공영 방송에 대해 야당을 중심으로 언론학계와 시민 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방송 저널리즘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과 방송계의 지구 노력을 주문한 역사 지평이 내재해 있다. 그러한 까닭에 다양한 이해의 교집합 속에서 수많은 논의와 합의를 거쳐 탄생한 현재의 방송법에서는 특히 공정성 논의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며 연관 조항들을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방송의 공정성 심의와 관련된 법 조항으로는 ‘방송법’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와 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제33조(심의규정), 그리고 제100조(제재조치 등)를 들 수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제6조는 방송 보도의 공정성 의무를, 제32조는 공정성 유지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제33조는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공포토록 하는 내용을, 그리고 제100조는 심의규정 위반 결정 시의 제재조치에 대한 하부 세칙들을 각각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다(배진아, 2015). 물론, 이 같은 현실에 발맞춰 언론학계에서도 방송법 및 방송 저널리즘을 둘러싸고 공정 보도의 정의 및 구성 요소, 그리고 실천 현황과 구현 방안 등에 대해 지난 수십 년간 활발한 논의를 전개해 왔다(e.g., 김연식, 2009; 손영준, 2011; 이완수·배재영, 2014; 이종혁, 2015; 이준웅·최영재, 2005; 최영재·홍성구, 2004).



그렇다면 제도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공정성은 칸트의 윤리형이상학적 차원에서 어떻게 인식될 수 있을까? 앞서, 칸트는 선의지에 대한 개념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의무 개념을 동원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즉, 감각적이거나 우연적인 경향성 또는 동기의 부착 없이, 실천 대상 행위가 무조건적으로 자신의 지시 명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행해져야만 비로소 해당 행위는 선의지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공정성이 선의지를 지니고 있는 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정성이 의무 개념에 의한 도덕적 정언 명령에 따라 무제한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방송 저널리즘을 둘러싼 공정성의 탄생 배경 및 그 정립 과정을 통시적으로 살펴볼 때 드러나는 분명한 사실은 공정성이 질료적인 조건을 수반하는 실천적 지시 규정일 뿐, 의무적 정언 명령으로 규정되는 지시 명령은 아니라는 것이다.

공정성 개념이 자국 고유의 정치적 상황 등을 감안한 실천적 지시 규정에 해당하기에 가언 명령에 불과하다는 명제는 비단, 한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한국뿐 아니라 영국이나 미국 등에서도 실천적 수행 대상으로 규정되고 있는 공정성은 실제로 역사적, 환경적 맥락 등에 따른 가변적 성질의 가언 명령에 불과하다. 현 사회의 방송 제도는 공익성과 공공성<sup>6)</sup>이라는 기대 결과를 의도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적 행동 조건으로 공정성을 추구하고 있는데—그 가장 대표적인 예로 방송 매체의 등장 초기에 전파의 희소성에 근거해 공공성과 공익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주어야 한다는 기본 전제를 들 수 있다—이는 이성 에 의해 선형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경험에 따른 주관적 조건이 의도적으로 부착된 것이므로 결코 실천 법칙으로 귀결될 수 없다.

역사적으로 볼 때, 경험 법칙이자 준칙으로서의 언론의 공정성 실천은 사회 구성원을 자유로운 시민으로 간주하는 서구 계몽주의 철학의 필연적인 도출 명제이다. 실제로, 미국을 필두로 한 서구의 언론 철학은 미디어의 역할이 시민들에게 민주 사회에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제대로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는다는 명제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듀이(Dewey)의 정치 철학을 계승해“(미국) 저널리즘의 최종 목표는 시민이 스스로 자유롭게 자치 정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공급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단언하는 코바치와 로젠스탈(Kobach & Rosenstiel, 2001/2003)의 주장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41쪽).

---

6) 공익성과 공공성이 과연 최고선인지, 아니면 최고선을 지향하는 도덕적 실천 원리들인지에 대한 논의 또한 도덕적 실천 규칙으로서의 공정성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논쟁의 초점을 공정성에 한정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선의지를 동반하지 않은 채 외적 조건이나 정념적 동기 등에 의해 수립된 준칙이 한 사회 내에서 광범위하게 통용될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될까? 특정 욕구나 주관적 의도를 자기 의지의 규정 근거로 전제하는 가언 명령들은 특정 행위를 기대 결과에 따라 실천한다고 설명한 바, 경험 준칙에 다름 아닌 방송의 공정성은 기대 결과에 따른 특정 행위를 필연적으로 시행하게 됨으로써 그 과정에서 수많은 윤리적, 실천적 문제들을 노정하게 된다. 공정성에 대한 구현 및 시행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공정성 구성 원리에 관한 논쟁에서부터 공정성 관련 심의 규정의 효율성 및 타당성에 대한 이의 제기는 물론, 공정성 개념의 무용론과 폐기론 제기 등이 그 대표적인 예들이다.

하지만 공정성이라는 언론 가치를 둘러싸고 언론인과 언론학자들이 마주하게 되는 가장 곤혹스러운 점은 언론의 공정성 구현(또는 구현 노력)이라는 명제가 언론의 최고선—만일 언론에 있어 고유 전통적인 최고선이 존재하거나 최고선을 상정할 의욕이 있다면—달성을 위한 보편적이고 타당한 역할을 올곧게 수행할 수 있는가 하는 규범적인 질문에 결코 만족스러운 답을 내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 언론과 언론인이 도덕 법칙의 지배를 받는 최고선을 염두에 두지 않거나 또는 최고선을 겨냥하지 않은 채 스스로의 직업 규범에 따라 공평무사하게 제작된 뉴스만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역할 수행을 무난하게 받아들인다면 이는 공정성에 관한 언론의 직업 규범이 정언 명령에 따른 의무적인 선의지를 보편적으로 수반하고 있다고 간주하기에는 어려운 바, 결과적으로 언론의 공정 보도가 도덕적이고 이상적인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고 촉진하기 위한 의도를 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공정 보도가 선의지를 지니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한국 언론이 의무적으로 추구해야 할 핵심적 직업 가치라고 이해하는 시각은 칸트가 『실천이성비판』(1788/2015)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험적으로 조건 지어진 이성이 자기만이 전적으로 의지의 규정 근거를 제공하려는 월권”을 행사하게 되는 셈이다(42쪽).

동일한 맥락에서 공정성의 개념 정립을 둘러싸고 지난 수십 년간 국내 언론학자들이 개진한 다양한 주장들 역시, 학자들 자신이 기대하는 결과를 부지불식간에 또는 의도적으로 담고 있기에 선형적이고 객관적인 법칙 수립의 원리로서 기능할 수 없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공정성 개념 정립을 둘러싼 여러 학자들 간의 의견 불일치는 “의지를 의지로서 절대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욕구된 결과의 관점에서만 규정”(Kant, 1788/2015, 75쪽)한 산물이기에 공정성이라는 인식 대상은 결코 보편적인 도덕 가치로 승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남표(2012)와 황성기(2014)는 공정성이 선형적으로 정의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역사적 맥락과 시대에 따라 의미가 변화하는 가변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토로한 바 있다.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에 기초해, 한때 ‘공정성의 원칙’을 채택했던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중국에는 개념

적으로 느슨한 동시에 다양성이라는 가치와 충돌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이 원칙을 폐기한 사실은 공정성이 도덕적 실천 규칙으로 전화(轉化)될 수 없는 윤리적 한계를 잘 반증하고 있다(강남준·김수영, 2008). 결국, 도덕적 의무에 따라 반드시 행해져야만 하는 지시 명령으로서 적절하게 작용하지 못하는 공정성은 선형적이고 이성적인 선의지를 지니지 못하는 바, 입법적 기능을 지닌 윤리적 실천 규칙으로 승화될 수 없는 준칙, 즉 경험적 가언 명령에 불과할 따름이다.

그럼, 다음에는 어떠한 실천적 행동의 기대 결과 없이도 의무에 따른 선의지를 규정했으며 인간 사회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최상위 도덕 원리를 2,500여년 전에 제시했던 공자의 유가 사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는 누구보다 엄정한 사고와 치밀한 추론 방식으로 자신만의 도덕 법칙을 수립했던 칸트가 정작 최고선 또는 최상위 도덕 원리가 과연 무엇인지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반면, 공자는 자신의 유가 사상을 통해 최고선으로서의 인(仁) 사상과 함께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 원리로서의 충서(忠恕)를 명징하게 제시했기 때문이다. 그런 연유로, 본고에서는 유가 사상의 최상위 도덕 가치와 이에 다다르기 위한 도덕적 실천 원리, 그리고 해당 실천 원리를 구성하는 하위 실천 규칙들을 살펴보고 그로부터 한국 언론이 마땅히 지향해야 할 최고선과 함께 최고선에 다가서기 위한 실천 원리 및 실천 원리의 하위 실천 규칙을 각각 유추해 내고자 한다.

## 2) 유가 사상에 기반한 이상적인 언론 보도

### (1) 칸트 철학에 대한 유가 사상과 언론학의 관심

역사적 변천사로 볼 때, 유가 사상의 발전 과정은 네 단계로 분류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유학의 시조인 공자(孔子)와 그의 뒤를 이은 맹자(孟子), 순자(荀子) 등의 사상을 통틀어 일컫는 원시 유가 또는 원유가(原儒家)의 단계이다. 두 번째는 한(漢)나라가 유학을 국교화한 이후, 원시 유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고증한 훈고학(訓詁學)의 시기이며, 세 번째는 송(宋)나라의 주희(朱熹)가 불교와 도교에 대응하기 위해 유학에 철학을 가미한 성리학의 발전 시기이다. 마지막으로 청나라 말기인 19세기 후반부터 서구 철학의 여러 이론들을 도입하면서 성리학을 더욱 깊이 있게 가다듬은 현대신유가가 있다(유훈우, 2009; 이인우, 2017).

이 가운데 신유학으로 분류되는 현대신유가는 서구 철학 가운데에서도 특히 칸트 철학에 주목하며 그의 학문 세계를 성리학에 접목시키려는 움직임을 활발하게 보여 왔다. 이는 서양 철학자들 가운데 이성과 도덕성이라는 주제를 형이상학적으로 깊이 있고 정밀하게 다룬 칸트가 인간의 본성(性)을 도덕성(理)이라고 본 성리학과 매우 유사한 관심사를 공유한 까닭에서다. 특히,

칸트의 3대 비판서<sup>7)</sup>를 모두 중국어로 번역한 牟宗三(모종삼)은 칸트 윤리형이상학의 성과와 한계를 세밀하게 논한 바, 이에 영향 받은 다수의 국내 동양철학자들 역시, 칸트에 대한 연구와 함께 모종삼의 칸트 비평 작업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왔다(e.g., 강영안, 2012; 김영건, 2004; 김형철·문병도, 2003; 유동환, 1998; 유일환, 2014; 유훈우, 2009; 임헌규, 2010; 홍원식, 1998).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트를 둘러싼 국내외 동양철학 연구자들의 관심은 윤리형이상학적인 측면에서 이성애 따른 인식의 한계를 논하거나<sup>8)</sup> 반대로 인식에 대한 이성의 무한한 가능성을 반증하는 것에 집중돼 있으며(강영안, 2012; 김영건, 2004; 유동환, 1998; 유일환, 2014; 유훈우, 2009; 홍원식, 1998) 칸트의 도덕 법칙을 합목적적으로 만족시키는 유가적 도덕 가치를 논술하거나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실천적 도덕 원리 등에 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e.g., 김형철·문병도, 2003; 문병도, 1997; 임헌규, 2010; 유일환, 2014) 이는 비단, 동양철학뿐만 아니라 언론철학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칸트의 비판 철학이 언론학자들의 관심을 끈 경우는 언론적 도덕 규범의 궁구(窮究)나 탐색을 위해서보다 ‘오성’(남궁협, 2012) 또는 ‘공적 이성’(조맹기, 2012) 같은 칸트의 철학 관념들을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분석하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가운데 임정수(2008)는 방송 저널리즘의 핵심 가치인 방송 공익의 존재 형식을 칸트 윤리학에 의거해 다룸으로써 한국 언론학이 마땅히 고민해야 할 근원적인 의제를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있다. 임정수(2008)는 방송 공익이 보편성과 필연적 의무, 그리고 선형성을 특징으로 하는 칸트 윤리학적 형식을 띠고 있지만 결국, 지나친 형식주의로 귀착되고 있으며 개념 역시, 포괄적이고 느슨해서 언론 현장에 실천적인 윤리를 제시하는 데에는 매우 미흡하다고 통찰력 있게 지적하고 있다.

## (2) 칸트의 도덕 법칙을 만족시키는 최고선으로서의 공자의 인(仁) 사상

총괄적으로 볼 때, 유가 사상의 최고선은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의미하는 ‘인(仁)’이다(e.g., 배병삼, 2002a; 이을호, 2014; Merrill, 2000/2010). 하지만 도덕 가치로서의 인(仁)이 유가의 최고선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든 유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

7) 칸트의 3대 비판서는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이다. 여기에서 비판이라는 단어는 비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인식 능력에 대한 한계와 가능성을 궁구(窮究)한다는 것을 뜻한다. 부연하자면, 「순수 이성 비판」은 인간의 논리적 인식 능력, 「실천 이성 비판」은 인간의 도덕적 실천 능력, 「판단력 비판」은 인간의 감성적 판단 능력에 대한 윤리형이상학적 논고를 다루고 있다(남궁협, 2012).

8) 칸트는 신의 존재, 자유 의지와 함께 영혼의 불멸성이 이성의 영역에서는 증명 불가능한 3대 명제라고 결론지었다.

(仁)에 대한 정의와 풀이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다. 예를 들어, 이을호(2014)는 인(仁)을 ‘사람다운 마음씨나 ‘사람 구실’(책임) 또는 ‘사람다움’으로, 인자(仁者)는 ‘사람다운 이’로 풀이하고 있다. 더불어 배병삼(2002a)은 인(仁)을 ‘어짚’과 함께 ‘사람다움’으로 풀이하고 있으며, 이인우(2017)는 인본주의적 의미를 지닌 ‘사람주의’라고 표현하고 있다. 반면, 인(仁)을 사전적으로 정의하고 개념화하기보다 별도의 풀이 없이 글자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김학주, 2012. 성백호, 1999).

현대신유가의 거장이자 칸트 연구가로도 유명한 모종삼(1968)은 인(仁)의 감정이 “초월적이면서 내재적이고 보편적이면서도 특수한 구체적인 도덕적 감정과 도덕적 마음”이라며 이 마음이 곧 맹자의 사단<sup>9)</sup>(四端)인 측은지심<sup>10)</sup>(惻隱之心), 수오지심<sup>11)</sup>(羞惡之心), 사양지심<sup>12)</sup>(辭讓之心), 시비지심<sup>13)</sup>(是非之心)과 동일하다고 보았다(강영안, 2012, 21쪽 재인용).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인(仁)을 초월적이면서 내재적인 마음으로 바라보는 모종삼의 인식이 실천 이성을 선형적이라고 본 칸트의 윤리형이상학과 동일선상에 있으며 인(仁)이 그 발흥과 실천에 있어 시공을 초월하는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고 여기는 그의 견해 또한, 칸트의 도덕 법칙을 합목적적으로 만족시킨다는 것이다. 더욱이 모종삼은 인(仁)이라는 도덕 감정의 성격이 모호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 생활에서 도덕성의 본질에 따라 다양하게 발흥되는 것이라며 맹자가 추상한 사단(四端)이 곧 인(仁)의 구체적인 발현 기제라고 이해하고 있다. 그리하여 모종삼은 맹자가 유가 사상의 핵심적인 네 가지 도덕 감정으로 꼽은 인(仁), 의(義), 예(禮), 지(智)가 최종적으로는 사람다움을 의미하는 최고선으로서의 인(仁)에 모두 귀속되는 도덕적 실천 원리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공자의 인(仁) 사상이 칸트의 도덕 법칙을 충족시키는 가치임을 실증하는 대표적인 논거는 『논어』의 팔일(八佾)편 3장에 등장하는 “사람으로 어질지 않다면 예(禮)는 무엇 할 것이며, 사람으로서 어질지 않다면 악(樂)은 무엇 할 것인가?”<sup>14)</sup>라는 공자의 언명에 있다.<sup>15)</sup> 유가 사상의

9) 인(仁), 의(義), 예(禮), 지(智)의 단서가 되는 네 가지 마음.

10) 남을 불쌍하게 여기는 타고난 착한 마음.

11) 자신의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옳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

12) 겸손하며 남에게 사양할 줄 아는 마음.

13)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마음.

14) 子曰“人而不仁 如禮何? 人而不仁 如樂何?” (자왈 “인이불인 여례하? 인이불인 여락하?”)

15) 이 논문에서는 해석의 통일성을 위해 배병삼(2002a, 2002b)의 『한글 세대가 본 논어 1, 2』를 『논어』 풀이에 대한 주 교재로 삼았다.

실천적 하위 규범이자 공자가 인(仁)의 구현을 위한 형식적 수단으로서 『논어』에서 무수히 강조하는 예(禮)와 악(樂)조차도 그 배경에 사람에 대한 어짐이 없을 경우에는 아무 의미가 없음을 웅변하는 이 같은 사고에서 우리는 특정 행위의 기대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그것이 보편적이고 타당한 선의지를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실천 이성이 지시하는 정언 명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최고선의 작동 원리를 유추할 수 있다.

개괄적으로 볼 때,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며 휴머니즘의 길을 걸어 나가려는 인(仁) 사상은 민주 사회에서 이상적인 언론의 존재 이유 및 존재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개개인 모두의 행복과 안녕을 보장하고 동시에 공동체 구성원들이 다 같이 조화로운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인본주의적 민주 사회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목표 지점을 공유한다 하겠다. 비록 서구 민주주의에 기반한 현대 언론의 현시적인 목표가 정확한 정보를 수용자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시민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또 자유롭게 자치 정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당면 목표는 결국, 시민들이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자유롭고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박애주의적 공동체를 이상향으로 지향하는 까닭에서다.

그렇다면, 인본적이고 박애적인 접근 방식으로 저널리즘을 구현하기 위한 도덕적 실천 원리로서는 무엇을 꼽아볼 수 있으며, 그 실천 원리는 어떠한 하위 실천 규칙들을 동반해야 할까? 이를 위해, 다음에는 유가 사상의 최고선인 인(仁)에 다다르기 위한 도덕적 실천 원리로서의 충서(忠恕)와 함께, 충서(忠恕)를 형성하는 세 가지의 핵심적인 실천 규칙-의(義), 예(禮), 그리고 중용(中庸)-에 대해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다(그림 2 참조).

### (3) 실천 원리로서의 충서(忠恕)

유가 사상에 있어 충서(忠恕)라는 윤리 덕목은 최고선인 인(仁)을 실천적으로 구현하는 도덕 원리이다(김형철·문병도, 2003; 유일환, 2014; 임헌규, 2010). 충서(忠恕)가 유가 사상의 최상위 덕목인 인(仁)의 실천적 도덕 원리로 작용한다는 근거는 『논어』 이인(里仁)편 15장에 잘 나타나 있다. 공자의 제자, 증삼(曾參)이 공자와 대화를 나눈 뒤, 동료들에게 공자의 도를 전해주는 장면에서 그는 “선생님의 도가 충서일 따름인 것!”<sup>16)</sup>이라고 언급하고 있다(배병삼, 2002a, 249쪽).

16) 子曰“參乎! 吾道一以貫之。”曾子曰,“唯!”子曰,門人問曰“何謂也?”曾子曰“夫子之道,忠恕而已矣”(자왈 “삼호! 오도일이관지.” 증자왈 “유!” 자출, 문인문왈 “하위야?” 증자왈 “부자지도, 충서이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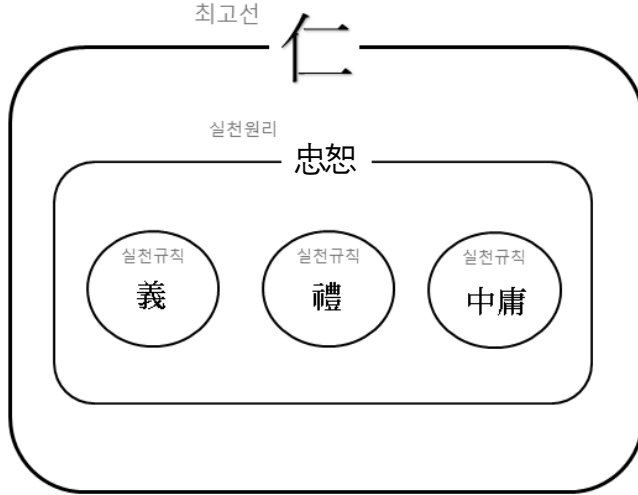


그림 2. 유가 언론학의 가치 구성도

충서(忠恕)를 풀이함에 있어 전통적인 유가 사상에서는 충(忠)과 서(恕)의 의미를 개별적으로 분리해 주목한 뒤,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전체적인 뜻을 전달하고 있다. 먼저, 충(忠)에 대해 가장 쉽고 명확한 풀이는 주자(朱子)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주자에 따르면 충(忠)자는 중(中)자와 심(心)자로 구성되는데, 이는 곧 마음이 중(中)의 상태로 정립되는 것을 의미한다(김학주, 2013; 성백호, 1999). 배병삼(2002a)은 충(忠)이 “마음을 집중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충(忠)은 “자신에게 한 점 부끄럼없기를 도모하는 윤리적 조건을 전제로 한다”고 강조한다(208쪽). 한결음 더 나아가 임현규(2010)는 충(忠)이란 표준 상태로서의 자기 정립을 의미하고 있으며 자기 정립은 곧 보편 덕인 인(仁)의 구현을 자기 임무로 삼고 있기에 충(忠)이 칸트의 정언 명령에 따른 의무 근거를 스스로 함유하고 있다고 인식한다.

충서(忠恕)를 형성하는 두 번째 의미구로서의 서(恕)에 대해 주자(朱子)의 성리학 창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남송(南宋)의 정자(程子)는 “자신에게 시행하여 원하지 않는 것을 나 역시 남에게 베풀지 않으려 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성백호, 1999, 93쪽). 이와 함께, 이을호(2014)는 서(恕)란 “인(仁)을 실천하는 방법이니 인(仁)은 서(恕)의 성과인 것”(74쪽)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김학주(2012)는 서(恕)가 인(仁)의 구현 방식이어서 쉽사리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풀이한다(82~83쪽). 이러한 서(恕)는 타인의 입장에서 헤아려 보는 ‘접어서 생각함’으로 이해되기도 한다(배병삼, 2002a, 250쪽)

그렇다면, 충(忠)이나 서(恕)가 각각 개별적으로 행해지는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가령 충(忠)이나 서(恕)가 독립적으로 행해진다면 이 역시 인(仁)을 향한 도덕적 실천 원리라 볼

수 있을까? 이에 대한 공자의 입장은 공야장(公冶長) 11장에 잘 나와 있다. “남이 저를 업신여기는 걸 바라지 않듯, 저 또한 남을 업신여기지 않고자 합니다”라고 말을 건넌 제자 자공(子貢)에 대해 “애야, 네가 미칠 바가 아니니라”<sup>17)</sup>(배병삼, 2002a, 249쪽)라고 대구하는 공자의 일성(一聲)이 그것이다. 여기에서 자공이 소망하는 바는 곧 ‘접어서 생각함’의 서(恕)를 체득하는 것이지만(김학주, 2012; 배병삼, 2002a; 이을호, 2014) 그의 바람이 서(恕) 속에 숨겨진 실천적 덕목으로서의 충(忠)의 긴절함을 느끼지 못했기에 공자가 자공의 서(恕)를 인가하지 않았다고 여겨진다(배병삼, 2002a).

그리하여 인(仁)을 구현하기 위한 당위적 의무 조건으로서의 충서(忠恕)는 칸트의 입장에서 볼 때 보편성과 타당성을 함목적적으로 만족시키는 도덕적 실천 원리가 된다. 이는 ‘자신에게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도모하는 윤리적 조건’이며 성찰과 부끄러움을 지니고 있는 충(忠)의 개념이 스스로의 행위가 올바른지 윤리적으로 기능하는 타당성의 개념으로 연결되며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않는 서(恕)의 정신은 곧 자신의 처지를 미루어 남의 처지를 생각하기에 공동체 구성원 사이에서 두루 통용될 수 있는 보편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인(仁)을 향한 선의지를 의무로써 내재한 충서(忠恕) 정신은 “너의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 법칙 수립의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위하라”(1788/2015, 91쪽)라고 결론지은 칸트의 명제에 적합하게 들어맞게 된다.

이에 따라 칸트의 윤리형이상학으로부터 현대 언론의 최고선과 함께 도덕적 실천 원리 및 실천 원리의 하위 실천 규칙을 도출하고자 하는 이 논문에서는 유가 사상의 최고선인 인(仁)과 더불어 인(仁)의 도덕적 실천 원리로서의 충서(忠恕) 정신에 기반해 뉴스 제작 현장에서 규범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천 규칙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덧붙이자면, 공자의 『논어』에는 무수히 많은 윤리 덕목과 도덕 강령들이 등장한다.<sup>18)</sup> 하지만 이 가운데 충서(忠恕)의 도덕 원리 아래, 현대 언론에서 취할 수 있는 실천적 도덕 규칙들은 직권주의적인 관점에서 개념의 구체성과 언론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 등을 두루 고려해 볼 때 크게 세 가지—의(義), 예(禮), 그리고 중용(中庸)—로 추려볼 수 있다. 사실, 이들 세 가지 이외에 지(智), 신(信), 호학(好學), 신언(慎言), 직(直), 내자성(內自省), 경(敬) 등과 같은 도덕 가치들도 언론의 직업 규범으로 활용될 수 있는

17) 子貢曰 “我不欲人之加諸我也，吾亦欲無加諸人。” 子曰 “賜也，非爾所及也。” (자공왈 “아불욕인지가제야야, 오역욕무가제인.” 자왈 “사야, 비이소급야”)

18) 『논어』에 등장하는 여러 윤리 덕목들로는 다음과 같은 개념들이 있다. 인(仁), 의(義), 예(禮), 지(知), 신(信), 호학(好學), 효(孝), 제(弟), 신언(慎言), 중용(中庸), 내자성(內自省), 도(道), 충(忠), 덕(德), 정명(正名), 직(直), 성(誠), 지명(知命), 경(敬).



요소를 충분히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여러 덕목들은 의(義), 예(禮), 그리고 중용(中庸)이라는 세 가지 핵심 덕목 안에 근본적으로 귀속된다고 여겨지는 바, 연구 논문의 분량에 대한 현실적인 제약까지 감안해 볼 때 본고에서는 이들 세 가지 실천 규칙들을 선별적으로 다뤄보고자 한다.

#### (4) 충서의 하위 실천 규칙으로서의 의(義)와 예(禮), 그리고 중용(中庸)

##### ① 의(義)

유가 사상에서 의(義)가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논어』에는 의(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제시돼 있지 않다. 비단, 의(義)만 그런 것이 아니다. 유가 사상의 최고선인 인(仁)을 비롯해 예(禮), 지(智), 신(信) 같은 실천적 하위 규칙들도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이을호(2014)는 공자가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그 문제의 논리적 정의 같은 것은 그다지 대견스럽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다”며 “오히려 대증투약(對症投藥)적 임기응답으로 보다 더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했던 것”(134쪽)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공자가 인식하는 의(義)를 보다 내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전적(典籍)들을 통해 그 뜻을 간접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먼저, 주자(朱子)는 『논어』 자한(子罕)편의 1장, “공자께서 드물게 말씀하신 것은 이익과 하늘의 명과 어둠에 관해서이다”<sup>19)</sup>(김학주, 2012, 143쪽)라는 문장을 주해함에 있어 이익을 따지면 의(義)를 해치기에 공자가 이(利)를 거론하지 않았다는 정자(程子)의 주석을 인용한다(성백효, 1999, 164쪽). 여기에서 이(利)란 개개인의 이익, 즉 사익(私益)을 뜻하기에 의(義)는 사익(私益)과 대척점에 있는 공익(公益)적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맹자 역시, 사회 공동체의 이익을 옹호하고 진작하는 것이 의로운 일임을 적극 옹호하고 있다. 의(義)를 행하는 것이 곧 인(仁)을 행하는 것이라고 본 맹자는 궁극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복지를 도모해 하는 것이 의(義)라고 주장한다(박경환, 2012). 한걸음 더 나아가 맹자는 사회 구성원들의 복지를 도모해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가 국가의 최고 지도자이기에, 무릇 한 나라의 왕은 의(義)가 자신이 통치하는 국가의 구석구석까지 미치도록 애써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런 까닭에 맹자는 자신의 저서인 『맹자』 첫 장에서부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진 양혜왕을 크게 꾸짖고 있다. 양혜왕이 자신으로부터 백성들에 대한 인의(仁義)를 구하기보다 개인

19) 子罕言利與命與仁 (자한언이여명어인)

적인 이익만 구하려 했기 때문이다.

의(義)에 대한 맹자의 이 같은 인식은 T. H. 마샬(Marschall, 1973)이 언급한 세 가지 유형의 시민권 가운데 세 번째 권리와 관련이 깊다. 마샬은 현대 시민권의 성장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주, 언론, 종교, 사유 재산권 등에 관한 법적 권리이고, 두 번째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관한 정치적 권리이다. 마지막 권리는 모든 개인이 최소한의 경제적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사회적 권리인데, 사회적 권리에는 최저 임금제의 시행에 따른 수혜를 비롯해 의료 보험, 실업 보험 등을 받을 권리가 포함돼 있으며 이는 곧 복지 입법과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있다(Giddens, 1989/1992, 279~280쪽에서 재인용)

한편, 『논어』에서 의(義)에 대한 언급은 모두 14차례에 걸쳐 등장하는데 이 가운데 의(義)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가 가장 적극적으로 제시되는 구절로는 공야장(公冶長)편 15장과 위령공(衛靈公)편 17장을 꼽아볼 수 있다. 먼저 공야장 편 15장에는 “공자께서 자산<sup>20)</sup>(子產)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그는 군자의 도를 ... 지니고 있었으니 백성을 부리는 것이 의로웠다”<sup>21)</sup>라는 구절이 나온다. 여기에 등장하는 의로움에 대해 배병삼(2002a, 258쪽)은 “사리에 공명정대하여 사사로이 일을 처리하지 않는 것”이라며 관료제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막스 베버가 주창했던 ‘합리적 업무 처리’를 유비시키고 있다. 또 위령공 편 17장에서는 “선생님 말씀하시다. 군자란 의로써 바탕을 삼고, 예에 합당하게 행동하며, 공손하게 말하고, 믿음으로써 완성하는 법. (그러면) 정녕 군자답다고 할 수 있으리라!”<sup>22)</sup>(배병삼, 2002b, 289쪽)라는 구절이 보이는데 이을호(2014)는 여기에서 언급되는 의(義)가 이른바 ‘정의’를 뜻한다고 풀이하고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배병삼(2002b)은 바탕으로 삼아야 된다는 의(義)가 ‘나침반’이나 ‘좌표축’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이들이 지리적인 위치와 방향을 가리키는 규구(規矩)<sup>23)</sup>인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의’는 시비곡직(是非曲直)과 전후좌우를 파악할 수 있는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것”(289쪽)이라고 해석한다. 군자가 군자답기 위한 제1 요건으로 의(義)가 먼저 등장하는 것은 이 같은 이유에 서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

20) 정(鄭)나라의 재상으로 공자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정치인. 인(仁)과 덕(德)을 겸비한 현인이었기에 그가 사망하자 공자가 애통해 했다.

21) 子謂子產 “有君子之道四焉 其行己也恭，其事上也敬，其養民也惠，其使民也義 (자위자산 “유군자지도사언 기행기야 공, 기사상야경, 기양민야혜, 기사민야의”)

22) 子曰 “君子義以爲質，禮以行之，孫以出之，信以成之，君子哉!” (자왈 “군자의이위질, 예이행지, 손이출지, 신이성지, 군자재!”)

23) 규구 준승의 준말. 원래는 목수가 쓰던 그림쇠, 자, 수준기, 떡줄을 통틀어 이르는 말. 일상 생활에서 지켜야 할 법도를 뜻함. 법 규, 굽자 구.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는 ‘위령공 편 17장의 의(義)를 풀이함에 있어 중국 송나라의 유학자인 정자(程子)는 “일을 제재하는 근본”이라는 의미의 ‘질간(質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의를 행할 때는 ‘절문<sup>24)</sup>(節文)이 있으며 낼 때는 반드시 겸손으로써 행하고, 이름은 성실해야 한다”고 덧붙인다(성백효, 1999, 316쪽). 칸트의 형이상학적 도덕 법칙을 연상시키는 듯한 정자(程子)의 이 같은 견해는 의(義)가 순수 실천이성에 따라 선의지를 동반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일을 제재하는 근본”이라는 표현에서 ‘일’이란 도덕적 실천 법칙에 따른 도덕 행위를, ‘제재란 ‘의무라고 인식하는 지시 규정으로서의 정언 명령’을, ‘근본’이란 선의지를 수반하는 순수 실천이성 그 자체로 유비되고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약적으로 볼 때, 『논어』와 『맹자』 그리고 여러 전적(典籍)들을 통해 추론해 볼 수 있는 의(義)는 사사로운 이익을 앞세우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일을 수행하는 도덕적 실천 규칙으로서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고르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회적 복지 차원의 윤리 강령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의(義)를 통해 역으로 그 정의를 유추할 수 있는 불의(不義)는 사회 공동체의 이익을 해치는 사익(私益) 추구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공익의 대척점에서 사회 구성원들의 복지 향상을 외면한 채, 지엽적인 이해 관계만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그 전형이다. 더불어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로 정부 차원에서는 낙동강 등의 수질을 심각하게 오염시킨 4대강 사업을, 기업 차원에서는 304명의 승객들을 수장시킨 세모 그룹의 세월호 침몰 사고나 수백 여명의 사상자를 낸 옥시 기습기 살균제 사건 등을 꼽아볼 수 있다. 물론, 언론사와 언론인 역시 불의(不義)를 저지를 수 있는 주체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의(義)를 행하고자 하는 언론사와 언론인은 정부나 행정 기관, 기업과 교육 기관 등이 공익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이기주의적 행태를 지양하고 경계하도록 끊임없이 감시하고 계도해야 한다.

그렇다면 공익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까? 이에 관해서는 늘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라고 강조한 공자와 민심(民心)은 곧 천심(天心)이라고 주장한 맹자의 민본 사상이 그 답을 제공하고 있다. 단 한 명이라도 물질적, 정신적, 신체적인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안타까워하고 애통해 하는 것이 의(義)를 숭상하고 불의(不義)를 멀리하는 유가 사상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공익은 바로 나 이외의 존재인 타인을 존중하는 서(恕)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 ② 예(禮)

유가 사상에 있어 최고선이 인(仁)이라면 최고선에 다다르기 위한 형식적 수단이자 도구적 절차

24) 예절에 관한 규칙이나 규범

에 해당하는 것이 예(禮)이다. 따라서 이상적 인격체로 공자가 자주 거론하는 군자는 이른바 예(禮)를 숭상하는 도덕적 존재다.

예(禮)와 관련해 『논어』에서 가장 유명한 어구로는 안연(顔淵)편 1장 2절의 “예(禮)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禮)가 아니면 듣지 말며, 예(禮)가 아니면 말하질 말고, 예(禮)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를 들 수 있다<sup>25)</sup>(배병삼, 2002a, 68쪽). 하지만, 안연 편을 포함해 『논어』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예(禮)를 강조하는 공자는 예(禮)가 관한 구체적인 정의나 예시를 세밀하게 제시하지는 않는다. 이에 반해, 맹자는 고자(告子) 상(上)편에서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은 인(仁)이고,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은 의(義)이고, 공경하는 마음은 예(禮)이고,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은 지(智)”(박경환, 2012, 309쪽)라는 설명을 통해 인(仁), 의(義), 지(智)와 함께 예(禮)가 지닌 의미를 명료하게 전달하고 있다. 그리하여 예(禮)에 대한 맹자의 관점을 언론학에 접목할 경우, 유가적 저널리즘이 지향하는 예(禮)는 취재와 뉴스 제작, 그리고 뉴스 보도에 관한 일련의 언론적 행위를 둘러싸고 취재원은 물론, 독자와 시청자들에 대해 공경의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갖춤으로써 이들을 인격적으로 진실하게 대해야 한다는 의무적 지시명령으로 귀결될 수 있다.

사실, 공자의 예(禮) 존중 사상은 유교가 예교(禮敎)라 불릴 정도로 유가 사상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예(禮)를 중시하는 자신의 신념이 어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을지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공자는 『논어』 곳곳에서는 예(禮)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예(禮)에 대한 강조가 자칫 예(禮)의 지나친 형식화, 경직화로 치닫는 것을 누누이 경계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실례가 앞서 언급했던 “사람으로 어질지 않다면 예(禮)는 무엇할 것인가?”라는 팔일(八佾)편 3장<sup>26)</sup>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내 언론이 절체절명의 신뢰적 위기를 겪고 있는 21세기 현재, 충서(忠恕)의 실천 규칙으로서의 예(禮)는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기능하며 동시에 인(仁)을 구현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이는 형식으로부터 유리된 내용-예를 들어, 뉴스 제작 과정에서 뉴스 취재원에 대한 예(禮)가 부재한 뉴스-은 결코 취재원의 신뢰를 끌어낼 수 없으며 내용 없는 형식-예를 들어, 뉴스 제작 과정에서 취재원에 대한 예(禮)는 행해졌지만 뉴스의 내용은 취재 대상자의 인권을 충분히 존중하지 않는 경우-또한 인(仁)의 본질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바, 형식과 내용이 모두 알맞게 조화를 이루어야만 비로소 이상적인 결

25) 顔淵曰 請問其目。子曰 非禮勿視，非禮勿聽，非禮勿言，非禮勿動。 顔淵曰 回雖不敏，請事斯語矣。(안연왈 청문기목. 자왈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언, 비례물동. 안연왈 회수불민, 청사사어의)

26) 子曰 人而不仁，如禮何？(자왈 인이불인 여려하?)

과를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뉴스 제작에 있어 예(禮)의 중요성에 주목하는 경우는 선행 연구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다. 가령, 이준웅과 김경모(2008)는 진·선·미(眞·善·美)의 개념에 기반해 공정 보도(眞), 검증 보도(善), 진정 보도(美)라는 세 가지 언론 수행 목표를 상정하며 이 가운데 세 번째 규범 가치인 미(美)가 품위 있는 뉴스를 의미하기에 품위 있는 뉴스 제작을 위해서는 진정한 표현, 정상성과 중용을 포함해 시민적 예절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들은 독자나 시청자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에서 품위를 지키기 위해 언론인들이 누구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느냐라는 '관계적 예의,' '존중,' '관용,' '절제,' '경청' 등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품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간주한다.

예(禮)를 중시하는 역사적 배경이 중화 민족의 문명에 대한 자부심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진순신(1992/1993)은 예(禮)가 문명국과 비문명국을 가르는 기준으로 작용한다고 인식한다. 동일한 맥락에서 진순신(1992/1993)의 견해를 유가 언론학에 연장적으로 적용해 볼 경우, 언론 문명국과 언론 비문명국을 가르는 기준 가운데 하나는 취재 및 뉴스 제작, 그리고 뉴스 보도 과정에 있어서의 시민적 예절에 기반한 상대방 존중이 될 것이며 언론인들은 당위적으로 이를 견지하고 실천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상대방을 공경함으로써 예를 숭상하고 동시에 무례를 멀리하는 취재 및 보도 방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될 수 있을까? 무릇, 상대방을 공경한다 함은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함을 의미하는 것이요,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한다 함은 곧 상대방의 인권을 존중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현대 민주 사회의 언론에 있어 상대방을 공경하는 예(禮)의 보도는 상대방,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취재원의 인격과 인권을 존중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 실제로 언론 윤리와 관련돼 학계에서 자주 언급되는 4가지의 PAPA(Privacy, Anonymity, Property, Access) 침해 사례 가운데 사생활 침해(privacy), 정보원 노출(anonymity), 재산권 침해(Property)의 세 분야는 취재원의 기본적인 권리를 등한시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비록, 대부분의 언론인들이 취재원의 사생활과 기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윤리 강령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강령의 준수 여부는 물론이거니와, 스스로의 위반 사항에 대해 스스로를 준엄하게 심판하지 않는 작금의 현실에서 이와 같은 인권 존중 사상은 취재 및 보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대인(對人) 관계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라는 서(恕)의 정신을 충(忠)으로서 지키라는 유가적 언론관으로 치환될 수 있다.

### ③ 중용(中庸)

중용(中庸)이라는 덕목이 유가 사상에서 얼마나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는 중용(中庸)에 관해 저술된 책으로서의 『중용』이 유학의 사서(四書)<sup>27)</sup> 가운데 하나로 추앙받아온 데에서 잘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어』에서 정작 중용(中庸)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 밖에 등장하지 않는다.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중용(中庸)에 관해 간접적으로 거론되는 구절까지 감안해도 겨우 두 차례만 보일 뿐이다.

『논어』에서 중용(中庸)이 직접 등장하는 곳은 용야(雍也)편 27장으로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중용의 덕성은 지극한 것이다. 사람들 중에 이를 지닌 이가 드물게 된 지 오래되었다’”(김학주, 2012, 99쪽)라는 구절이다. 이와 함께 중용(中庸)의 경지가 간접적으로 언급되는 자한(子罕)편 7장에서는 “내가 아는 게 있나? 아는 것은 없다. (다만) 무지렁이라도 내게 물을 적엔, (그 질문이) 텅 빈 것 같더라도 난 그 양끝을 헤아려 힘껏 알려줄 뿐이다”(배병삼, 2002a, 467쪽)라는 글귀가 등장한다. 이 글귀는 『예기』 속에 자사(子思)가 편찬해 넣은 중용(中庸) 장(章)<sup>28)</sup>에 다시 등장한다. 부가적으로 덧붙이자면 이을호(2014)는 배병삼이 ‘양끝’이라고 번역한 ‘양단(兩端)’을 ‘일의 본말(本末)’이라고 보고, “진후를 살피 극진히 일러주지”(138쪽)로, 김학주(2012)는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다 들추어내어, 아는 것을 다하여 일러 줄 것이다”(145쪽)라고 풀이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용(中庸)은 과연 무엇을 뜻할까? 중용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중용』의 1장인 “하늘이 사람들에게 내려준 것을 본성(理)이라 하고, 본성에 따르는 것을 도(道)라 하고, 도를 닦는 것을 가르침(教)이라 한다”(김학주, 2013, 5쪽)라는 구절부터 살펴 보도록 하자. 이유는 “하늘이 사람들에게 내려준 것을 본성이라고 한다”는 구절이 중용(中庸)의 중(中)과 용(庸) 가운데 중(中)에 대한 이해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김학주(2013)에 따르면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의 사서(四書) 체계를 확립한 성리학자들은 ‘본성’이 곧 ‘이(理)’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理)’란 이치나 원리 또는 이성을 뜻한다. 하늘에서 내려준 본성은 곧 이성이며 이성을 따르는 것이 법칙에 해당하는 도(道)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 체계는 『중용』이 사서(四書)로 확립된 지 약 600년 뒤에 등장한 칸트의 윤리형이상학과 대단히 유사하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칸트는 인간이 존귀한 이유가 자연적 원인성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는 도덕적 이성의 소유자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

27) 『논어』, 『맹자』, 『대학』, 『중용』

28) 주자는 후에, 이 부분을 따로 떼어내 『중용』(中庸)이라는 이름의 독립적인 책으로 편찬했다.

그리하여 『중용』 1장은 희로애락(喜怒哀樂)의 네 가지 감정이 드러나지 않은 이성적 상태-칸트의 입장에 비추어 보자면 감각적 주관성이나 정념적 경향성을 배제한 상태-가 곧 본성을 의미하는 중(中)이 되며, 네 가지 감정이 드러나더라도 모두 절도에 맞는 것-역시 칸트의 관점에서 도덕 법칙에 따라 보편성과 타당성을 만족시키는 것-이 화(和)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중화(中和)란 ‘중용(中庸)의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중화(中和)는 중용(中庸)의 도를 따를 때 비로소 이뤄질 수 있다(김학주, 2013, 7쪽). 그런 중용(中庸)은 “언제나 가장 알맞고 가장 바르고 가장 잘 조화되는 것”<sup>29)</sup>(김학주, 2014, 102쪽)이며 다른 윤리 사상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유가 사상만의 독특하고 두드러진 관념 가운데 하나이다.

전통적인 중용(中庸) 사상에 기반한 이상적 언론 보도는 도덕적인 감정과 선형적인 본성(이성)의 적절한 조화 속에서 극단들 사이의 중간 지점을 택해 뉴스를 취재하고 제작하기를 권면(勸勉)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중용(中庸) 보도는 객관 보도나 공정 보도와 어떻게 다르게 인식될 수 있을까? 만일, 객관 보도가 정확한 사실을 중심으로, 또 공정 보도는 취재의 절차적 과정을 중시하며 각각 중립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에서 취재 사안을 보도하는 것이라고 거칠게 정의할 경우, 중용(中庸) 보도는 수많은 언론 기사들이 스스로의 관점에서 규정한 객관 보도와 공정 보도를 포괄적으로 아우르며 보다 공식적이고 통합적인 시각에서 보도 방향을 정해 이를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객관 보도, 공정 보도라는 주장을 내세움에도 불구하고 언론사마다 자사(自社)의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제각기 자기중심적인 보도를 견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들 언론사의 이념적 다양성을 모두 인정하는 가운데, 가장 보수적인 시각에서부터 가장 급진적인 관점까지 모두 수용하고 받아들임으로써 해당 시점에서 제일 원만하고 조화로운 자세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다.

이와 함께, 발생 사건이나 취급 기사의 전개 상황을 현재 시점에서 단선적으로 보도하는 직업 의례에서 탈피, 의제의 본질을 중심으로 그 역사성까지 고려해 뉴스를 통시적으로 바라보고 재단하는 것 또한 중용 보도가 추구하려는 목표가 된다. 그리하여 극단적인 이념들도 진실의 일정 부분을 보여준다고 인식하고 이들을 수용하는 자세는 중용(中庸)의 ‘양단(兩端)에 대해 ‘양 끝’과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라고 풀이한 배병삼(2002a)과 김학주(2012)의 시각을 공식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되며, 사건의 본질을 탐구하고 그 역사적 배경을 깊이 있게 따져 맥락까지 찬찬히 살피는 보도는 중용(中庸)을 일의 본말과 전후를 살피는 것이라고 바라보는 이을호

29) 이 역시 칸트의 도덕 철학적 시각에서 보자면 논리적 인식 능력을 의미하는 순수 이성과 감정적 판단 능력을 뜻하는 판단력, 그리고 도덕적 실천 능력을 대변하는 실천 이성이 잘 조화된 상태를 의미한다 하겠다.

(2014)의 입장을 통시적으로 반영한 언론 행위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사실은 중용(中庸) 보도가 동시대에 있어 매우 광범위하게 분산된 다양한 종류의 시각들이 중국에는 모두 총체적인 진실을 형성하는 소중한 요소이자 구성물이라고 간주하며 이들을 종합적으로 아울러서 그 무게 중심을 찾아 제작 뉴스의 중핵으로 위치지우고자 꾀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의(義)와 예(禮)를 앞세운 보도가 자신들의 역할에 지나치게 충실함으로써 자칫 한쪽으로 쏠리거나 넘칠 수 있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경계함으로써 언제나 일정한 정도 이상을 벗어나지 않도록 유도하고 계도하는 역할 또한 중용 보도의 몫이 된다.

각각의 언론사들이 모두 자기 고유의 공론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또 해당 공론장 내에서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한다고 볼 때, 중용(中庸) 보도를 채택한 언론사가 추구하고자 하는 역할은 여러 공론장의 입장들이 고르게 수용되는 ‘공론장들의 공론장’으로서 기능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대립적인 시각들 간의 타협을 꾀하고 그림으로써 사회 내의 긴장과 갈등을 완화시켜 해당 사회가 지닌 잠재력-이상 사회에 도달하기 위해 발현 가능한 노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꾀하는 것이다.

## 5. 결론

일찍이 하버마스(Habermas)는 경험 지평으로서의 현대사가 과학외적 맥락에서 사회과학적 연구 작업의 주요 질료를 형성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1990/2013). 나아가 연구자는 비단 현대사 뿐만 아니라 현대사의 형성에 조건적 원인성을 제공하는 과거사 역시, 경험 지평으로서의 사회과학적 연구 작업의 주요 질료를 형성한다고 인식하고, 조선 왕조 500년의 국가 철학이었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한국 사회에 부지불식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유가 사상이 위기의 한국 언론에 대안적 언론관을 제시하는 질료로 기능할 수 있다고 간주한다.

지난 수십 년간 공정성을 둘러싸고 언론학계에서 전개된 담론은 양과 질에서 모두 귀한 성과를 축적해 왔다. 하지만 취재 및 보도 방식의 균형성과 중립성, 사실성 등에 방점을 두는 절차적 개념으로서의 공정성은 언론이 지향해야 하는 최고선을 위한 수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에 한국 언론의 도덕적이고 당위적인 역할 명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공정성 대신, 최고선을 향한 목적으로서의 윤리 규범이 활발하게 논의돼야 한다. 그리하여 인(仁)을 지향하는 충서(忠愬)에 기반한 언론학이 저널리즘 윤리의 최고선에 합목적적으로 부합하며 따라서 이 같이 유가적 가치관을 토대로 한 유가 언론학이 21세기의 새로운 언론 철학으로 제고되어야 한다는 결론



을 도출하기 위해, 연구자는 먼저 **옳은 언론**,<sup>30)</sup> 바람직한 언론의 이상적인 규범 가운데 하나로 꾸준히 거론되는 **공정성**이 사실은 선의지를 동반한 의무로서의 정언 명령이 아니라 경험 조건이 부착된 가언 명령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논증하였다.

도덕 철학을 전개함에 있어 연구자가 칸트의 윤리학을 이론 전개의 시발로 삼는 이유는 18세기 이후의 영·불 철학이 근대 시민 국가의 성립을 둘러싸고 국가와 지배 계층의 폭력적 권력으로부터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쟁취하려는 사상적 이념에서 비롯된 데 반해, 칸트의 윤리학은 개개인이 자유와 권리를 마땅히 향유해야 할 존재이기에 앞서 이성을 지닌 존재자로서 선험적으로 인지하는 도덕 법칙을 따라야만 하는 윤리적 존재라고 고찰하고 있으며, 이러한 예지(叡智)가 도덕적으로 올바른 인간상의 구현을 꾀하는 유가 사상과 동일한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연구자는 서구의 계몽 철학에 강하게 영향 받은 경험 지평들로부터 가급적 최대한 거리를 두는 가운데 한국 고유의 사상 철학을 본고에서 제기하는 윤리 담론에 반영하고자 했으며, 사람됨으로서의 인(仁)의 중요성을 한평생 설파하고 충서(忠恕)를 통해 인(仁)의 실천을 몸소 행하고자 했던 공자의 유가 사상이 도덕이라는 주제에 한평생 천착해온 칸트의 윤리형이상학과 대단히 잘 들어맞는다고 판단했다.

유가 언론학을 논하는데 있어 칸트의 윤리형이상학이 동원된 또 다른 이유는 공자의 『논어』가 도덕 강령과 가치들을 모아놓은 경전에 해당하기에 논리적인 엄정성을 제대로 담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자신의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 수많은 개념과 용어들을 치열하게 고안해 세밀하고 정교하게 펼치고 있는 칸트의 『윤리형이상학 정초』와 『실천이성비판』은 유가 사상이 사회과학적 연구 작업의 질료로 활용될 수 있는 논증 기반을 탄탄하게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트의 윤리학이 지닌 치명적인 약점은 최상위 도덕 법칙으로서의 최고선이 무엇인지, 더불어 최고선을 지향하는 실천 원리와 실천 원리의 하위 실천 규칙들로는 어떤 구성물들이 존재하거나 존재해야 하는지—칸트의 표현에 따르면 개개의 윤리 세칙이나 도덕적 행위의 사례—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기에 현실에서 실천적 도덕 법칙으로 삼을 만한 윤리 덕목들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칸트 철학과 공맹 사상을 저널리즘의 최고선 구축 작업에 도입해 활용하고자 한 연구자의 의도는 뉴스 제작에 있어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라는 명제가 곧 정언 명령에 따른 의

---

30) 이와 관련해 김세은(2006)은 '옳은 언론'과 '좋은 언론'을 통해 언론의 최고선 달성을 위한 수단의 활용에 있어 수단이 목적으로 인식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논의한 바 있다. 비록, 김세은은 자신의 논문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언론이 옳은 언론이라며 본 연구자의 주장과는 다른 견해를 피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세은의 논의 이후 한국 언론이 합목적적으로 지향해야 할 최고선에 대한 철학적 논의는 전반적으로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무로서 선의지를 함유하는 인(仁) 사상, 그 자체이기에 인(仁)의 정신이 곧 (한국) 언론의 규구(規矩)가 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물론, 만고불변의 도덕 법칙으로서의 인(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배려하는 동시에 자신의 도덕적인 행위 실천에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 충서(忠恕)가 최고선을 지향하는 윤리적 실천 원리로서 작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윤리적 실천 원리로서의 충서(忠恕)는 유가 언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세 개의 실천 규칙들로 구성될 수 있는 바, 이들이 이른바, 의(義)와 예(禮), 그리고 중용(中庸)이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한국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친숙한 철학이 유가 사상이기에 언론학내에서도 유가 언론학적인 담론이 풍성하고 윤택하게 발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오랫동안 언론학의 외곽에 머물러 있던 윤리 문제를 전경(前景)에 내세움으로써 올바른 민주 사회의 유지와 번영을 위한 촉매로서의 저널리즘이 21세기의 한국 사회에서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최고선이 무엇인지에 대한 도덕적 논의가, 유가 사상에 바탕을 둔 유가 언론학을 통해 점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오랜 기간이 소요될 장도(長途)에 이제 막 첫발걸음을 내디딘 터라 내용과 방법, 그리고 논거의 전개 방식에서 아직 거칠고 미숙하기 짝이 없는 이 논문이 언론과 언론인, 그리고 언론학자들의 존재 목적에 대한 제고를 통해 언론의 사명 및 역할에 대해 한층 진지하게 고찰하고 논쟁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 참고 문헌

- 강남준·김수영 (2008). 미국 방송 공정성 원칙 규제 정책의 변천 과정과 함의. <방송연구>, 67호, 113-139.
- 강명구 (1989). 탈사실의 시대에 있어 뉴스공정성의 개념구성에 관한 연구. <신문연구소학보>, 26호, 83-112.
- 강영안 (2012). 칸트 도덕 철학에 대한 모종삼의 이해 문제. <철학논집>, 제 29집, 7-34.
- 김세은 (2006). 민주주의와 언론의 신뢰: '옳은 언론과 '좋은' 언론에 대한 이론적 모색. <한국언론학보>, 50권 5호, 55-78.
- 김세은 (2013). 한국 언론의 자기성찰: 미디어 보도와 미디어 비평. <한국 언론의 품격>. (147~248). 서울: 나남.
- 김연식 (2009). 방송 저널리스트의 공정성 인식 연구. <한국언론학보>, 53권 1호, 161-186.
- 김영건 (2004). 모종삼의 도덕적 형이상학과 칸트. <신학과 철학>, 6호, 229-254.
- 김학주 (2012). <논어>.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김학주 (2013). <중용>.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김형철·문병도 (2003). 儒家와 칸트의 도덕판단 방법론 비교 연구: 恕와 정언명법을 중심으로. <철학>, 77권, 325-359.
- 남궁협 (2012). 칸트의 「판단력 비판」으로부터 커뮤니케이션의 본원적 의미에 대한 성찰. <한국언론학보>, 53권 1호, 391-414.
- 류춘열 (2016). 다시 돌아보는 언론의 신뢰도: 언론인의 도덕성과 전문성, 그리고 수용자의 정치 성향의 영향. <사회과학연구>, 29집 1호, 59-81.
- 박경환 (2012). <맹자>. 서울: 홍익.
- 박성진 (2003). 한국 사회 신뢰의 악순환과 민주주의의 공고화. <동향과 전망>, 58호, 7-40.
- 배병삼 (2002a). <한글 세대가 본 논어 1>. 서울: 문학동네.
- 배병삼 (2002b). <한글 세대가 본 논어 2>. 서울: 문학동네.
- 배진아 (2015). 지상과 방송의 공정성 심의: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적용 심의의결 사례 분석. <방송통신연구>, 2015년 봄호, 9-41.
- 성백효 (1999). <논어집주>.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 손영준 (2011). TV 공정성에 대한 시민 인식 조사: 시민은 동등 비중의 원칙을 더 원한다. <한국방송학보>, 25권 5호, 122-158.

- 오대영 (2015). 언론사 대학평가 기사가 고교생의 대학 평가와 언론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9권 4호, 102-130.
- 유동환 (1998). 칸트 철학의 유학적 재해석: 모종삼의 도덕 형이상학을 중심으로. <시대와 철학>, 9권 1호, 101-130.
- 유일환 (2014). 칸트의 황금률 비판과 유가의 충서(忠恕) 개념. <철학사상>, 53권, 3-25.
- 유훈우 (2009). 모종삼의 칸트 철학과 유학 비교. <칸트 연구>, 24집, 157-197.
- 이남표 (2012). 공정성 심의, 의결 기능의 과잉을 해소해야. <방송문화>, 8월호, 10-15.
- 이완수·배재영 (2014). 영상보도의 기계적 균형성: 18대 대선후보 보도에 나타난 '전략적 의례' 탐색. <커뮤니케이션 이론>, 10권 4호, 365-403.
- 이을호 (2014). <한글 논어>. 서울: 을재.
- 이인우 (2016). <유가철학 속의 언론사상: 「논어」 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행정언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종혁 (2015). 언론 보도에 대한 편향적 인식이 공정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 우호적, 중도적, 적대적 매체에 대한 비교 검증. <한국언론학보>, 59권 1호, 7-36.
- 이준용·김경모 (2008). '바람직한 뉴스'의 구성조건. <방송통신연구>, 67권, 9-44.
- 이준용·최영재 (2005). 한국 신문 위기의 원인: 뉴스 매체의 기능적 대체, 저가치 제공, 그리고 공정성의 위기. <한국언론학보>, 49권 5호, 5-35.
- 임정수 (2008). 방송 공익의 개념적 파생에 대한 칸트 윤리학적 논의. <한국언론학보>, 52권 6호, 282-299.
- 임현규 (2010). 유가의 도덕 원리와 칸트. <한국철학논집>, 29집, 125-152.
- 정용준 (2013). 존 리스의 공영방송 이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방송학보>, 27권 2호, 305-332.
- 정윤식 (2013). <방송정책>.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 조맹기 (2012, 5월). <칸트에서 공중의 의미>. 한국언론학회 봄철학술대회 발표논문. 경주: 힐튼호텔.
- 진순신 (1993). <공자왈 맹자왈>. 서울: 고려원.
- 천병희 (2013). <니코마코스 윤리학>. 서울: 숲.
- 최영재·홍성구 (2004). 언론 자유와 공정성. <한국언론학보>, 48권 6호, 326-342.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4). <2014 언론수용자 인식조사>.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5). <2015 언론수용자 인식조사>.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황성기 (2014).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31권 1호, 93-118.

홍원식 (1998). 『칸트 철학의 유학적 재해석: 모종삼의 도덕 형이상학을 중심으로』를 읽고. <시대와 철학>, 9권 1호. 131-136.

牟宗三 (1978). 心體與性體 第一冊. 臺北: 中正書局.

Blach-Ørsten, M. & Burkal, R. (2014). Credibility and the media as a political institution. *Nordicom Review*, 35, 67-79.

Gallup (2016). Confidence in institutions. Retrieved from <http://www.gallup.com/poll/1597/confidence-institutions.aspx>

Giddens, A. (1989). *Sociology*. 김미숙·김용학·박길성·송호근·신광영·유홍준·정성호 역 (1992). <현대 사회학>. 을유문화사.

Hallin, D. C. & P. Mancini (2004) *Comparing media systems: three models of media and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Harbermas, Ü. (1990). *Strukturwandel der Öffentlichkeit*. 한승완 역 (2013). 공론장의 구조 변동. 서울: 나남.

Kant, I. (1785).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백중현 역 (2015). <윤리형이상학 정초>. 서울: 아카넷.

Kant, I. (1788). *Kritik der praktischen Vernunft*. 백중현 역 (2015). <실천이성비판>. 서울: 아카넷.

Kobach, B., & Rosenstiel, T. (2001). *The elements of Journalism*. 이재경 역 (2003). <저널리즘의 기본 요소>.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Kohut, A., Doherty, C., Dimock, M., & Keeter, S. (2012). Further decline in credibility ratings for most news organizations. Retrieved from <http://www.people-press.org/2012/08/16/further-decline-in-credibility-ratings-for-most-news-organizations/>

Marshall, T. H. (1973). *Class, citizenship and social change in the twentieth century*. London: Macmillan.

Merrill, J. (2000). *Legacy of wisdom: the great thinks and journalism*. 김동률 역. (2010). <철학자들의 언론강의>. 서울: 나남.

Newman, N., Lavy, D. A. L., & Nielsen R. K. (2015). Reuters Institute digital news report 2015. Reuters Institute for the Study of Journalism. Retrieved from <http://reutersinstitute.politics.ox.ac.uk/publication/digital-news-report-2015>

Newman, N., Fletcher, R., Lavy, D. A. L., & Nielsen R. K. (2016). Reuters Institute digital news report 2016. Reuters Institute for the Study of Journalism. Retrieved from <http://reutersinstitute.politics.ox.ac.uk/publication/digital-news-report-2016>

Vultree, F. (2010) Credibility as a strategic ritual: the Times, the Interrogator and the Duty of Naming. *Journal of Mass Media Ethics*, 25, pp. 3-18.

최초 투고일 2017년 12월 13일  
게재 확정일 2018년 5월 11일  
논문 수정일 2018년 6월 3일

Abstract

## Does fairness reportage aim at the Supreme Good?

The limitation of fairness reportage in Kantian perspective and suggesting the alternative of Confucian Journalism

**Hoon Shim**

Professor, Dept. of Media Communication, Hallym University

This paper investigates the moral philosophical problems of fairness reportage, which works as the universal professional norm in Korean journalism, in the perspective of Kantian metaphysics of morals. Next, the researcher introduces the Supreme Good of Confucianism, the benevolence, and documents that the spirits of sincerity and consideration by Confucius, working as the practical norm of the benevolence, corresponds to Kantian moral law purposively. Finally, this paper introduces the three practical principles which fulfill the value of the sincerity and consideration—justice, courtesy, and golden mean—and considers that these three practical principles needs to be utilized for the embodiment of Confucian Journalism.

**Keywords:** fairness, Kant, Confucius, Mencius, Confucian Journalism